

김남훈

변호사

민법 기출해설강의

-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를 이해
-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
-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
- 고난이도의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하는 강의
- 출제된 지문의 관련판례와 비교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 막연하게 암기하였던 판례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강의

■ 강의일정 2020년 6/9(화) ~ 6/26(금), 오전, 월~금 강의, 총 14 회
오전 9:30 ~ 1:00

■ 교 재 FOUETTE 법원행시 민법 진도별 기출정리(저자, 2019년판)
+ 2019년 법행기출문제(제공)
+ 민법쟁점정리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I. 민법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법원행정고시 민법 1차 시험은 판례위주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자는 법원행정고시와 사법시험 합격자인 서기관, 사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응용된 판례 지문까지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의특징

한편 아래의 기출문제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중요 쟁점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권법에서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합격하게 되는 법원행정고시의 특성상 1차 시험의 합격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고난이도의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의 합격을 위하여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중요 내용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중요 법리를 학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법의 중요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의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이다.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8년 기출]

⇒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판례이다.

강의특징

●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 ㄱ.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 ㄴ.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ㄷ.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 ㄹ.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ㅁ.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부적법하다.
- ⇒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로 지문이 구성되었다. 모든 지문이 2차 시험에 사례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강의특징

- 매매계약에 관한 아래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 사례 >

甲은 2019. 3. 1. 그 소유 X토지(당시 이미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음)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천만 원으로 하면서 그중 3백만 원만 당일 지급받았고, 7백만 원은 같은 해 3. 3.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도금 4천만 원은 같은 해 5. 1.에 지급받으면서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잔금 5천만 원은 같은 해 8. 1.에 지급받으면서 그 전까지 A의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아래 각 설명은 상호 독립적임)

< 설명 >

ㄴ. 甲의 또 다른 채권자 B는 甲의 乙에 대한 잔금채권 5천만 원을 2019. 6. 1. 가압류 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해 6. 15.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받고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A의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해 A가 X토지에 대해 2019. 7. 1.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乙은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을 2019. 7. 15. 공탁하였다. 2019. 8. 1. B가 乙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판례가 출제되었다.

■ 강의특징 II. 강의진행방법 및 수강방법

12년도부터 19년까지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의 각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시험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출제된 지문의 관련판례와 비교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2차 시험에 대한 대비까지 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을 할 것입니다. 즉 기출된 모든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시험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출제된 쟁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심화된 내용도 강의를 할 것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면 그동안 막연하게 암기하였던 판례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생 분들은 각자 기본서로 예습을 해야 합니다. 각자 기본서로 예습을 하고, 강의를 수강한 후에 강의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복습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합격하는 상황에서 남들과 동일하게 노력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진도표는 없습니다. 민총(3회), 물권(4회), 채권(5회), 친상(2회)의 분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습이 필요한 분들은 매 회 약 40면 정도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